



## 한국인의 대(對)중동 인식과 정책적 함의

2020-14

장지향 선임연구위원

강충구 책임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2020.04.20

### 들어가며

아산정책연구원은 2019년 아산연례조사에서 한국인의 대(對)중동 인식을 조사했다. 응답자에게 중동의 이미지, 중동 중요성, 시리아 난민 및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중동출신 이민자 인식으로 구분해 비교·분석했다. 한국인의 중동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중동에서 에너지 자원 부국 등 긍정 이미지를 연상했고(54.8%), 중동지역이 우리 국익에 있어 중요하다고 봤다(80.3%). 여성보다는 남성,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에서 중동 이미지가 더 좋았다. 한편 중동에서 중립적이거나 부정 이미지를 떠올린 응답자조차 중동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한국인은 중동출신 이민자에 대해 매우 부정적(70.9%)이었고, 이는 다른 지역 출신에 비해 뚜렷한 편향을 나타냈다. 중동에 대해 긍정 이미지를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중동출신 이민자를 반기지 않는 이중성을 드러냈다. 한국인의 중동을 향한 배타성과 이중성은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났다. 절반 이상(60.5%)이 우리나라가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국인의 중동 인식에 내재된 사회적 편향은 미국 주도의 이란 제재 참여에 대한 의견에서는 덜

뚜렷했다. 절반 넘게(61.4%)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인의 대(對)중동 인식보다 세계적 추세인 반(反)트럼프 정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즉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자국 중심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 중동 이미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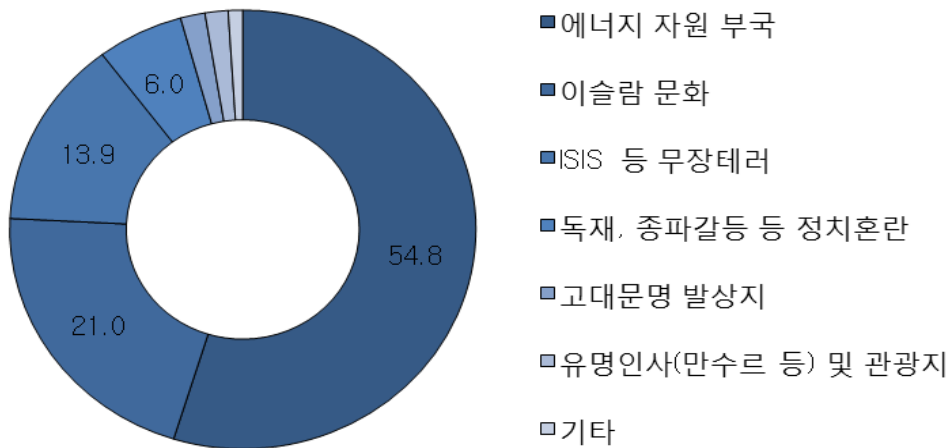
중동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중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응답이 편향되지 않도록 문항에 대한 응답지는 '긍정'(①에너지 자원 부국, ②유명인 및 관광지), '중립'(③이슬람 문화, ④고대문명 발상지), '부정'(⑤ISIS 등 무장테러, ⑥독재, 종파갈등 등 정치혼란)으로 나눠 구성했다. 절반 이상(54.8%)은 중동을 에너지 자원 부국과 연관시켰다([그림 1]). 다음으로는 이슬람 문화 21%, ISIS 등 무장테러 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독재, 종파갈등 등 정치혼란은 6%, 고대문명 발상지(1.7%)와 유명인사(만수르 등) 및 관광지(1.6%)를 꼽은 비율은 2% 이하로 소수였다.

중동에 대한 이미지가 에너지 자원과 높게 연관된 점은 한국이 원유 70% 이상을 중동 산유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1월 미국의 이란 사령관 제거작전으로 고조된 중동 전운과 유가 간의 밀접한 관계가 여론의 관심을 끈 점은 이를 방증한다. 중동의 부국 이미지 역시 우리와 경제교류가 잦은 아랍 산유국과 연관 있어 보인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우리의 최대 건설 수주국이자 중동 내 최대 수출국이며, 2019년 2월에는 UAE의 실질적 지도자 모하메드 빈 자이드(MbZ) 아부다비 왕세제가 방한한 바 있다. 또 다른 아랍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도 2019년 6월 방한해 우리와 10조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다음으로 이슬람 문화를 떠올린 비율이 21%에 이른 점은, 국내 무슬림 인구가 이주민을 포함해도 전체 인구 대비 0.3%도 안 되는 15만명 수준이란 현실을 고려하면 높은 편이었다. 이는 이슬람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도가 높아서라기 보다는 이슬람을 중동지역을 대표하는

종교 또는 문화로 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1] 한국인의 중동 이미지 인식 (%)



또 ISIS 등 무장테러를 꼽은 비율이 13.9%로 나타난 점은 이들의 무자비한 테러 활동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 자주 다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5년 한국 청소년의 ISIS 가담은 국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관련 사건이 있을 때마다 회자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독재, 종파갈등 등 정치혼란(6%)도 중동의 연상 이미지로 꼽힌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두 가지 부정 이미지와 중동을 연관 지은 응답(⑤+⑥)은 총 19.9%였다. 전반적으로 긍정(①+②), 중립(③+④)이 각각 56.4%, 22.7%였으므로 중동에 대한 한국인의 이미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중동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긍정, 중립, 부정으로 재코딩해 인구사회학적 변수 별로 교차 분석을 했다. [표 1]에서 보듯이 중동 이미지는 성별, 연령대, 중동출신 이민자 인식에 따라 달랐다. 성별에 따라선 남성이 긍정 62.4%로 여성(51.7%)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여성이 정치·사회이슈 등에 더 관용적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중동 이미지는 남성에

서 더 긍정적이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남성에서 긍정 이미지인 에너지 자원 부국을 연상한 비율(남 61% vs. 여 49.8%)이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sup>1</sup> 남성에서 중동을 에너지 자원 즉 경제와 연관 짓는 경향이 더 뚜렷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더 많고 고령층의 경우 과거 '중동 건설 붐'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중동 이미지 인식 (%)

		긍정	중립	부정	검정값
전체 (n=1500)		56.4	22.7	19.9	-
성별	남성 (n=734)	<b>62.4</b>	21.0	16.6	$\chi^2=18.579,$ $df=2, p<.001$
	여성 (n=751)	51.7	24.9	<b>23.4</b>	
연령대	20 대 (n=257)	44.7	29.2	<b>26.1</b>	$\chi^2=41.753,$ $df=8, p<.001$
	30 대 (n=242)	50.0	27.3	<b>22.7</b>	
	40 대 (n=288)	56.2	27.1	16.7	
	50 대 (n=297)	<b>62.3</b>	18.9	18.9	
	60 세 이상 (n=401)	<b>65.6</b>	16.5	18.0	
중동출신 이민자	긍정적 (n=432)	<b>68.5</b>	19.0	12.5	$\chi^2=35.854,$ $df=2, p<.001$
	부정적 (n=1053)	52.2	24.6	<b>23.2</b>	

연령대별로는 긍정 이미지가 20대 44.7%에서 60세 이상 65.6%로 점차 늘었다(30대 50%, 40대 56.2%, 50대 62.3%). 반대로 부정 이미지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젊은 층에 비해 고령층에서 중동 이미지가 더 좋았다는 의미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 ISIS의 무자비한 폭력, 중동 장기독재의 연쇄 몰락과 권위주의 회귀의 정치적 혼란이 비교적 근래에 빈번하게 알려지면서 젊은 층은 중동에서 부정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고령층은 과거 한국의 '중동 건설 붐'과 오일 머니 벌이에 대한 직

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자원 부족 등의 긍정 이미지를 더 연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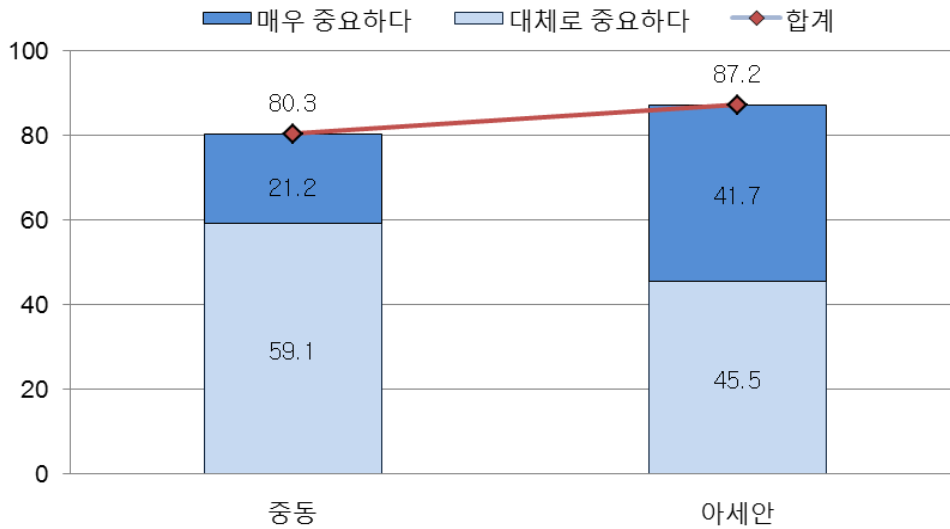
위의 차이는 중동출신 이민자 인식에 따라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중동출신 이민자를 긍정적으로 볼수록 중동에서 긍정 이미지를 떠올린 비율은 68.5%로 높았다(부정적 52.2%). 두 집단간 격차는 15% 포인트 이상이었다. 즉 중동출신 이민자에 대해 더 관용적일수록 중동을 긍정 이미지와 연관시켰고, 중동에서 긍정 이미지를 떠올릴수록 중동출신 이민자에 대해 관대했다. 여성에서 부정적 중동 이미지가 우세한 점은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이후 증폭된 난민 성범죄 가짜 뉴스 및 이슬람 혐오정서와 연관 있어 보인다. 당시 예멘인 500여 명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자 난민법 폐지 청원과 반대 시위가 잇달았다. 잠재적 성 폭력범과 테러리스트에게 세금을 쓸 수 없다는 목소리가 퍼지면서 여성층에서 안전에 대한 공포가 급속히 확산됐다. 당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예멘 난민에 대한 적대감은 20~30대 젊은 층과 여성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sup>2</sup>

## 중동 중요성 인식

다음으로 우리 국익에서 중동지역이 중요한 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단일 문항으로 중요성 인식을 측정한 경우, 응답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sup>3</sup> 이러한 편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세안에 대한 중요성 인식 결과와 비교했다([그림 2]). 중동의 중요성에 공감한 비율은 80.3%로 나타났다. 단일 문항으로 측정한 결과라는 한계에도, 다수가 우리 국익에 있어 중동지역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국익에 있어 아세안이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87.2%) 보단 낮았지만, 다수가 중동지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중동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가 21.2%, '대체로 중요하다'가 59.1%로 인식의 강도가 아세안의 경우보다 약했다. 아세안에 대해선 '매우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41.7%, 45.5%로 비슷했다. 각각이 국익 차원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중동 19.7%, 아세안 12.8%에 불과했다.

[그림 2] 한국인의 중동 중요성 인식: 중동 vs. 아세안 (%)



[표 2]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인의 중동 중요성 인식은 중동 이미지, 중동출신 이민자 인식에 따라 달랐다. 중동에서 긍정 이미지를 연상할수록, 또는 중동출신 이민자를 긍정적으로 볼수록 중동지역의 중요성에 더 공감했다. 특히 중동출신 이민자 인식을 기준으로 한 결과(긍정 85.6%, 부정 78.2%)에 비해, 중동 이미지에 따른 중요성 인식의 차이가 더 컸다. 중동에서 긍정 이미지를 떠올린 응답자는 90.4%가 중동이 국익에 있어 중요하다고 답했다. 중립, 부정 이미지를 연상한 응답자는 각각 69.2%, 64.1%로 20~25% 포인트 가량 낮았다.

이는 앞서 중동에 대한 긍정 이미지로 에너지 자원 부족 요인을 선택한 경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즉 중동 원유 수입 및 오일 머니 의존도→에너지 자원과 국가 경제의 상관관계→국익에 있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립, 부정 이미지는 문화(이슬람 문화, 고대문명 발상지), 정치(무장테러, 정치혼란) 등의 요인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국익과는 연관성이 낮게 본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대(對)중동 태도에 따른 중동 중요성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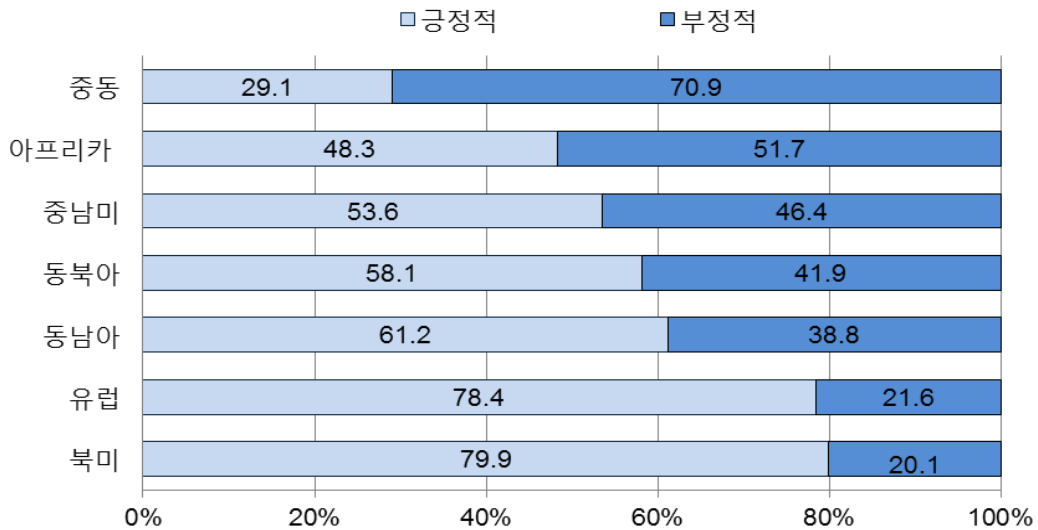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검정값
전체 (n=1500)		80.3	19.7	-
중동 이미지	긍정 (n=846)	<b>90.4</b>	9.6	$\chi^2=130.672,$ $df=2, p<.001$
	중립 (n=341)	69.2	30.8	
	부정 (n=298)	64.1	35.9	
중동출신 이민자	긍정적 (n=436)	<b>85.6</b>	14.4	$\chi^2=10.589,$ $df=1, p<.001$
	부정적 (n=1064)	78.2	21.8	

### 중동출신 이민자 인식

중동 이미지, 중동 중요성을 통해 본 한국인의 중동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과거 본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타자나 소수자에 표면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배타적이었다.<sup>4</sup> 이러한 한국인의 이중성이 중동 인식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신지역별 이민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함께 살펴봤다.<sup>5</sup> 중동지역에 대한 태도와 직접 비교할 순 없지만, 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분석 결과, 한국인은 중동출신 이민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중동출신 이민자를 긍정적으로 본 비율은 29.1%로 조사에 포함된 지역 중에서 가장 낮았고, 부정적 인식은 70.9%로 가장 높았다. 이는 북미나 유럽출신 이민자에 대해 80%가량의 한국인이 긍정적이라고 한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북미 79.9%, 유럽 78.4%). 두 번째로 부정적 인식이 높았던 아프리카출신 이민자에 대한 긍정·부정적 인식의 차이가 오차범위 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의 이민자 인식은 유독 중동출신에게만 부정적이었다. 이는 중동에 대한 한국인의 내재된 편견이 드러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3] 한국인의 출신지역별 이민자 인식 (%)



일정한 거리를 둔 상황에선 중동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지만, 한국 사회 내 이민자로 가정할 경우 중동출신은 일종의 낙인(stigma)으로 작동했다. 중동이라는 지역을 지칭했을 때 드러나지 않았던 배타성이 중동출신 이민자 인식에서는 발견된 것이다. 출신, 인종 등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이 중동에서 강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은 중동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라는 앞선 결과와 크게 모순된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이중성과 같은 맥락에서, 겉으로는 중동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중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국인의 중동 이미지 인식에서 ISIS 무장테러, 독재 및 종파갈등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음에도 중동출신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중·일의 무슬림에 대한 태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동북아가 이슬람에 의한 직접 테러 대상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반(反)이슬람 정서가 높았던 조사 결과와 일치했다.<sup>6</sup> 이런 한국인의 편향된 중동관은 ① 일부 서구 사회에 존재하는 이슬람 혐오정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 ② 중동 관련 정보를 주로 서구의 시각에서 풀어 낸 뉴스 보도를 통해 접하는 매체 환경, ③ 중동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신속하게 확산시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탓으로 보인다.



## 중동 이슈에 대한 태도: 시리아 난민 및 이란 제재 인식

다음에서는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국제사회 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난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우리의 경제 규모와 국력에 따른 책임 있는 역할 수행, 난민협약조약국의 의무 이행과도 맞물린 이슈다. 앞서 드러난 한국인의 타자에 대한 이중성은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났다. 절반 이상(60.5%)이 우리가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반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답은 39.5%였다.

시리아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인권 문제로 부상했지만, 다수는 한국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반(反)이민 정서 등으로 국내 다문화 수용성이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인의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대한 태도는 중동 이미지, 중동출신 이민자, 중동 중요성 인식에 따라 달랐다. [표 3]을 보면 중동에서 긍정 이미지(57.1%)를 떠올릴수록 각각 중립(67.2%), 부정(63.1%) 이미지를 연상한 응답자에 비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덜했다. 중동에서 긍정 이미지를 연상한 응답자는 절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2.9%가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봤다.

같은 맥락에서 중동출신 국내 이민자를 긍정적으로 볼수록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대해 긍정적(57.3%)이었다. 난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다. 반대로 중동출신 이민자에 부정적인 응답자는 67.9%가 우리나라가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기를 바랐다. 이는 중동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을 의미했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 또 국내 이민자, 난민 문제는 인권 문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서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사회적 관용과 관련이 덜한 중동 중요성 인식에 따라서도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이 엇갈렸다는 것이다. 국익에 있어 중동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난민 문제

해결에 대한 부정적 의견(57.8%)이 덜 뚜렷했다. 반대로 중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본 응답자는 71.5%가 난민 문제 해결에 우리가 적극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봤다. 다른 변수를 기준으로 한 결과보다 응답이 편향되어 있었다. 이는 국익의 관점에서 중동지역이 중요하지 않다고 본 응답자는 난민 문제를 지역 문제로 규정짓고, 이에 대한 해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대(對)중동 태도에 따른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 (%)

		나서야 한다	나서지 않아야 한다	검정값
전체 (n=1500)		39.5	60.5	-
중동 이미지	긍정 (n=846)	<b>42.9</b>	<b>57.1</b>	$\chi^2=11.270,$ $df=2, p<.05$
	중립 (n=341)	32.8	67.2	
	부정 (n=298)	36.9	63.1	
중동출신 이민자	긍정적 (n=436)	<b>57.3</b>	42.7	$\chi^2=82.186,$ $df=1, p<.001$
	부정적 (n=1064)	32.1	<b>67.9</b>	
중동 중요성	중요하다 (n=1205)	42.2	<b>57.8</b>	$\chi^2=18.572,$ $df=1, p<.001$
	중요하지 않다 (n=295)	28.5	<b>71.5</b>	

다음으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도하는 대(對)이란 제재 참여 여부에 대한 태도를 분석했다. [표 4]를 보면 절반이 넘는 61.4%가 미국 주도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반면, 38.6%는 제재 참여를 지지했다. 미국발 이란 제재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 견해는 세계적으로 확산된 반(反)트럼프 정서와 맞닿아 보인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19년 32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부정 평가가 64%로 매우

높았다(긍정 29%). 이는 부정 평가가 각각 43%, 57%를 기록한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의 신뢰도보다 더 낮았다.<sup>7</sup>

[표 4] 대(對)중동 태도에 따른 미국 주도 이란 제재 참여 (%)

		동참해야 한다	동참하지 않아야 한다	검정값
전체 (n=1500)		38.6	61.4	-
중동 이미지	긍정 (n=846)	35.5	<b>64.5</b>	$\chi^2=13.816,$ $df=2, p<.05$
	중립 (n=341)	39.0	<b>61.0</b>	
	부정 (n=298)	47.7	52.3	
중동출신 이민자	긍정적 (n=436)	32.1	<b>67.9</b>	$\chi^2=10.923,$ $df=1, p<.05$
	부정적 (n=1064)	41.3	58.7	
시리아 난민	나서야 한다 (n=592)	34.8	<b>65.2</b>	$\chi^2=5.967,$ $df=1, p<.05$
	나서지 않아야 한다 (n=908)	41.1	58.9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제재는 반(反)트럼프 정서를 정당화하는 사례로 자주 등장한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6개국(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이란이 어렵게 이룬 다자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고강도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 강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편향 행보와 함께 이뤄졌다. 이란 핵 협정 탈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 자국 대사관을 옮겼다. 2019년엔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했고 2020년 발표한 중동평화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을 인정했다. 모두 국제법에 위배되는 결정이었다.

미국 주도의 이란 제재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 인식은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반(反)트럼프 정서와 관련 있어 보인다.<sup>8</sup>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금 분담 협상을 앞두고 우리에게

게 노골적인 인상 압박을 가해왔다. 2019년 여러 차례 미국이 전 세계를 돕느라 많은 돈을 쓰고 있으나 한국이 이를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동맹 관계에서 지불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거래식 동맹관을 피력했고 우리에게 기존 방위금의 5배 증액을 요구했다.

미국 주도 이란 제재에 대한 의견은 중동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관계없이 동참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대로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느 응답층에서도 절반을 넘지 못했다. 그만큼 미국 주도 이란 제재 참여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대(對)중동 태도 보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으로는 이란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선 어느 정도 관심이 있지만 다른 비(非)경제 이슈에 대해선 큰 관심이 없고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먼저 중동 이미지는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동참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의 격차가 약 12% 포인트, 다른 변수 즉 중동출신 이민자,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한 태도에 따른 격차도 약 7~9% 포인트 수준으로 크지 않았다. 이 결과는 ①평소 한국인이 중동 관련 국제 이슈에 대해 뚜렷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아서, 또는 ②대(對)중동 태도와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이 일관적 방향성을 갖기에는 거리가 먼 것으로 봤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중동에 대한 인식에 비해, 중동 이슈에 대한 한국인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았다. 이는 평소 특별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중동 이슈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가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인식 등과 같은 다른 단서를 이용해 답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나가며: 대(對)중동 정책에 주는 함의

첫째, 한국인은 중동에 대해 모순적으로 인식했다. 중동에서 대체로 긍정 이미지를 떠올렸지만 중동출신 이민자에 대해선 유독 부정적이었다. 중동출신 이민자를 향한 배타성은 소수자 및 타자에 대한 이중성에 이민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와 근거 없는 이슬람 혐오정서가 더해져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대(對)중동 편향은 여성과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각각 2018년 제주 난민 사태를 거치며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가짜뉴스가 확산됐고, 최근 몇 년 새 극단주의 테러조직 ISIS의 무차별적 폭력이 알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편향된 대(對)중동 인식은 중동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가 낮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최대 에너지 자원 공급처이자 건설·플랜트 수주시장으로 중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중동의 정치·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포용성 확대엔 큰 관심을 두지 않은 탓도 있다. 지금껏 대(對)중동 외교의 키워드는 원전·자원 외교, 세일즈·비즈니스 외교, 제2의 중동 붐 창출이었다. 실제로 한국은 2018년 최대 건설 수주국이자 원자력발전소 최초 수출국인 UAE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2019년에는 사우디와 10조원 규모의 경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중동 오일 머니에 대한 높은 관심과는 달리 중동을 공존과 협력의 파트너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충분치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먼저' 의제를 외교정책에도 적용해 사람중심 외교로 상대국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고 했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한국인의 대(對)중동 편향과 이슬람 혐오정서는 상대의 마음을 얻는 외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대(對)중동 공공외교 현황을 점검하고 한-중동간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문화·인적 교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젊은 층과 여성의 오해와 달리 국내 난민 신청자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테러·전쟁·독재정권 폭력의 피해자에 가깝다. 또한 UAE, 사우디 등 산유국뿐 아니라 비산유국인 터키,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등은 극단주의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다국적 군사작전에

동참했다. 이들 중동 국가들은 테러 격퇴를 위해 2014 년 미국이 65 여 동맹국과 함께 조직한 반(反)ISIS 국제연합전선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중동과 이슬람에 대한 한국인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선 대(對)중동 편향이 뚜렷했던 젊은 층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동영화제, 중동문화제를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1500 여 중동출신 유학생과 한국 젊은 층의 교류를 늘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금껏 주한 외교사절단과 주요 인사가 참여했던 이슬람의 금식성월 라마단 이프타르 행사에 한국과 중동 학생을 초대해 문화·소통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한국과 중동 젊은이의 교류 확대는 중동 내 한국의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둘째, 한국인은 중동 관련 이슈에 다소 불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 특정 의견을 비추긴 했지만 이는 대(對)중동 태도와는 관계가 없었다. 여기에는 ①응답자가 평소 중동 이슈를 접했다고 하더라도 특정 의견을 형성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거나, ②중동 이슈 문항에 다른 단서를 이용해 답했을 가능성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첫 번째 결과와 동일하게 정부의 대(對)중동 정책이 경제에 치우쳐 한국인이 중동과 지역 내 변화에 무관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한-중동간 협력을 경제 차원 이상으로 확장하기 위해 중동지역의 변화에 맞춰 장기 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UAE 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은 심화되는 안보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방사회와 산업 다변화를 위한 국가 체질 개선에 나섰다. 보수 이슬람과 석유 의존 체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여성인재 영입, 공공부문 축소, 첨단과학 분야 육성 등의 혁신으로 맞서고 있다. 이러한 파격적인 개혁개방 정책에는 어느 세대보다 글로벌 감각이 뛰어난 청년·여성층이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이 대목에 주목해 중동의 혁신을 이끌 청년·여성층이 현장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교육·연구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미 UAE 와 사우디에 경제발전경험 공유 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 KSP)과 여성 리더십 과정을 비롯한 학술 시스템을 지원·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가 인재육성에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교육기관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는 국가별, 분야별로 개혁 추진 내용과 역량을 차별화해 청년·여성층이 실전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들을 공략해야 한다.

셋째, 한국인은 표면적으로나마 중동지역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한국인은 중동 이미지, 중동출신 이민자 인식과 관계없이 중동지역이 국익에 중요하다고 봤다. 이는 중동에서 에너지 자원을 가장 먼저 떠올린 점과 연관이 있었다. 중동을 중요하다고 본 시각은 4강 외교에 우선순위가 밀릴 수 밖에 없었던 정부의 대(對)중동 정책에 주는 함의가 크다. 국내 여론에 중동을 중요하게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은 향후 정부의 독자적, 능동적 대(對)중동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외교 다변화의 방안으로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나 대(對)중동 정책에 대한 구체적 구상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인이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여론을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국제규범에 입각한 대(對)중동 정책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국제사회 내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걸맞도록 다자·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대(對)중동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물론 국제규범을 강조하는 중견국 외교정책은 당장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단기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중동 내 핵 확산 금지, 인권보호, 민주주의 지지를 강조하는 중견국 의제 실천은 장기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에게 한반도 의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 윤리적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동북아를 넘어선 중동 무대에서 역내 긴장과 인도적 위기를 해소할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 1월 미국과 이란의 날 선 대립구도에서 절충안을 낸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동지역에서 국제규범과 원칙을 따른 사례이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맞서 호위연합를 조직한 후 우리에게 동참을 요구했으나 우리는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 아덴만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이란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해 항행의 자유 원칙에 기반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되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중견국 의제 실천을 통한 중동지역

질서 안정은 한미공조에도 득이다. 또한 중동의 불안정 해소를 위한 우리의 독자적 기여는 4 강 중심 외교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도 부합한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현재 독자적 중동 정책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는 UAE 와의 전략대화를 중동 여러 나라로 확대·정례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동 이슈가 난민, 이민자 문제와 연관되면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국내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때 정부는 난민 신청이 난민협약조약국인 우리의 난민법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처리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법과 절차에 따른 난민·인도적 체류자의 수용과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향후 우리 사회가 다수의 이민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중요하다. 현재로선 전체 인구 대비 소수에 불과한 국내 무슬림 인구가 이후 증가하게 되면 한국 사회가 사회·문화적 갈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본 조사는 그간 소홀히 다뤄졌던 중동에 대한 여론조사로는 드물게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표집(Quota sampling)을 이용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했다. 외교안보, 경제, 사회 이슈 등에 대한 인식 조사의 한 부분으로 다뤄졌지만 자료의 가치는 높게 평가할 만하다. 나아가 향후 중동 관련 인식 조사 자료가 더 축적되면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부록

###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 개요

조사대상: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1,500 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로 응답자 패널 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9 년 12 월 4~24 일

실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

---

<sup>1</sup> 실제로 남성, 여성 모두 중동 이미지는 에너지 자원 부족, 이슬람 문화, ISIS 등 무장테러를 꼽은 비율의 순으로 높았으나, 각 항목에서는 남녀간 차이가 있었다(이슬람 문화 남 19.1% vs. 여 23.3%, ISIS 등의 무장테러 남 11.2% vs. 여 16.8%;  $\chi^2=21.598$ ,  $df=5$ ,  $p<.05$ ).

<sup>2</sup> 김승현 2018. "젊을수록 난민 반감 컸다. 20 대는 58%, 40 대는 37%가 적대적". *중앙일보*. 2018 년 8 월 5 일자(<https://news.joins.com/article/22860830>). 전체적으로 난민에 우호적, 적대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50.7%, 44.7%였다. 난민에 대한 적대감은 여성 50.4%, 남성 38.9%로 여성에서 11.5% 포인트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적대적이란 응답이 20 대 58%, 30 대 54.4%로 40 대(37%), 50 대(37.3%), 60 세 이상(40.9%) 보다 더 높았다.

<sup>3</sup>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은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보이거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응답지를 선택하는 경향을 말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문항을 이용해 여러 대상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미국/중국/일본/북한]에 얼마나 호감을 느끼십니까?" 등의 방식으로 여러 대상을 동시에 측정해서 응답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본원은 2010 년부터 예시로 제시한 문항을 이용해 주변국 호감도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2019 년 연례조사는 문항 수, 조사 목적 등의 제한으로 여러 대상을 포괄하는 문항을 구성하지 못했다. 참고로 동일한 워딩으로 아세안의 중요성을 측정한 문항은 비교를 위해 분석에 이용했다.

- 
- <sup>4</sup> 2019 년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에 대해 거부감이 들지 않다는 응답은 79.5%나 됐다(거부감이 든다 20.5%). 그러나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외국인의 소득, 직업, 출신, 인종 등에 따라 허락할 수 있다가 43.1%,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은 42.8%로 비슷했고, 허락할 수 없다가 14.1%였다. 표면적으로 외국인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보였지만, 자신과 직접 관련된 상황에선 외국인에게 배타성을 표출했다.
- <sup>5</sup> 김지윤·강충구. 2018. 달한 대한민국Ⅱ: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이슈브리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8 년 본원은 출신지역별 이민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를 이슈브리프를 통해 발표한 적이 있다. [그림 3]은 동일한 조사의 2019 년 자료이다.
- <sup>6</sup> 정회욱. 2018.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무슬림에 대한 태도 비교 분석. *국제·지역연구*. 27 권 1 호. 113~146.
- <sup>7</sup> Wike R., Poushter, J., Fetterolf, J., and Schumacher, S. (2020). Trump ratings remain low around globe, while views of U.S. stay mostly favorable: Trump foreign policies receive little support. *Pew Research Center*. Retrieve from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0/01/08/trump-ratings-remain-low-around-globe-while-views-of-u-s-stay-mostly-favorable/>
- <sup>8</sup> 한국갤럽. 2019. 글로벌 리더 13 인 호감도: 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조사. 갤럽리포트.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084>). 글로벌 리더 호감도를 순지수(호감-비호감 응답 비율 격차) 기준으로 보면 트럼프 미 대통령 호감도는 하락했다(2017 년: -47→2018 년: -51→2019 년: -61).